

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로 국회 설득하겠다”

“일상 국정은 총리가 해 나가야”...책임총리제 구현 강력 의지 국정과제 가야사 연구 지시...마한사 포함 고대사 활성화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일자리 추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좋은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이뤄진다면 1987년 개헌 이래 정권교체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해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면에서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고대사가 삼국사 중심으로 연구되다 보니 삼국사 이전 고대사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고, 가야사는 신라사에 겹쳐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야사가 경남 중심으로 경북까지 미친 역사로 생각하는데 사실 더 넓다”며 “삼진강 주변 광양만, 순천만 심지어 남원 일대까지 맞물리고 금강 상류 유역까지도 유적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넓은 역사이기 때문에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87년 이후 임기가 시작된 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취임 37일째인 2003년 4월2일에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는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15일 안에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 이 기록이 깨진다.

이와 관련, 전남지역에서는 마한 역사 연구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여서 고대사 연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8월 중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러 국회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아 온 일자리 문제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대변인은 또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확실하게 구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인준됐으니 제가 약속한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며 “일상적 국정 과제는 총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로 연결해 주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차매 국가책임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계획을 완성해 보고하겠다는 사회수석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 등으로 소득분배 악화를 저지하고, 구조적으로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두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리 중인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준 하루만에...가뭄현장 찾은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가 1일 봄 가뭄으로 말라 갈려져 버린 경기 안성시 마둔저수지에서 가뭄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 부담금 부과 검토 일자리위 “일자리 정책 재설계·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민간기업 가운데서도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며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준 100일 이내에 교육·노동·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을 전면 재검토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이후 5년간 관련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삼세면 재기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흔히 문재인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취임 100일 이내에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완벽히 정부 조직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이다.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평가 지표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81만개 일자리 재원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다소 낭비성 예산이 있었다. 4대강 사업예산도 그렇고 해외자원개발 문제도 있

었다”며 “이런 데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며 “고액 재산가와 고소득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자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확실하게 구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인준됐으니 제가 약속한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며 “일상적 국정 과제는 총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로 연결해 주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3野 ‘일자리 추경 반대’ 공동 전선

“차기 정부에 부담 전가”...국회 통과 진통·격돌 예고

야권은 1일 여권이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6월 임시국회에서의 격돌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협조한 국민의당이 추경 문제에서는 공무원 추가 채용 등을 문제 삼아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야가 여권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한 형국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정이나 대규모 재·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나 다른 야당들의 공동 인식이며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our.yeosu.go.kr
여수시 YEOSU CITY

너와 나는 세계는 아름답구나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오직 당신만을 위한 힐링여행

| 낭만 |

| 미식 |

| 문화 |

| 힐링 |